

# 비례도 농어촌도 못줄이면... 증원론 다시 '고개'

### 野 “의석수 늘리자” vs 與 “불가” 끝없는 평행선 농어촌 통폐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 “단식 투쟁 불사” 정개특위, 오늘 재가동... 확정위, 단일안 도출할수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의 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3일 재가동되지만 또다시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에 가로막혀 공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0대 총선부터 적용될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주에 선거구 획정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244~249개 범위가 적절함을 따져보고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획정위의 결정대로라면 농어촌 지역구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막기 위해 논의 재개에 나서려는 것이다.

연합은 표면적으로 비례대표 감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 지역 의석수 감소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일각에서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증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 의석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의원정수 증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이를 연속 회의를 열고 지역구 수 244~249개 범위의 6개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획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단일 확정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의 확정 작업이 속도를 내는 양상을 보이자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이 유력한 대상 지역 의원들은 단식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상경집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감 현장 - 광주과기원

### “GIST 인제 지역 정착책 마련을” 미방위 의원들 현장 시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 연구개발특구본부에 현장 시찰했다.

홍문종 위원장 등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 14명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GIST 오톨관을 찾아 문승현 GIST 총장, 운병환 광주특구 본부장으로부터 차례로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질의에 나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민병주 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은 “GIST에서 성장한 인재가 다른 곳으로 떠나기보다 광주에 남아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도 “GIST 출신 인재가 지역에 안착해야 광주·전남 경제가 발전하고 호남과 수도권 간 격차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고등과학기술 연구소(APRI)를 방문해 연구소의 성과를 보고받고 극초단 광양자빔 특수연구동 등을 둘러봤다. /김지을기자 dok2000@



文, 공군 국정감사 질의 22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농어촌 버릴거냐” 文 압박

새누리당은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막으려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야당 내의 농어촌지역 의원들의 공동 행보와 맞물리면서 문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도 “비례대표를 줄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면서 향후 선택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22일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 정수 유지’ 방침이 “농어촌을 버리겠다는 뜻이자 전략공천을 통한 친노(친노무현)계의 당권 장악 시도”라며 문 대표를 몰아세웠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 회의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촌의 대표성을 소중히 여겨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

으로 하는 게 현재 결정에 부합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문 대표는 농어촌 지역구를 버릴 건지, 지킬 건지 분명하게 밝혀 이런 혼란을 없앨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야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감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거론, “다수의 야당 농어촌 의원도 획정위의 획정 기준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인물

### 박근혜 정부 호남 차별 인사 비판 민심 전달 ‘장병 특별 휴가증’ 공개 전 물어 정보력 발휘

#### 박지원 새정치 의원



국감에서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사촌 형부의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미 2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구속 기소했다는 의혹

을 제기, 일명 ‘형부 게이트’의 이슈화를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또 “매년 1000명 이상이 검찰 수사 과오로 구속돼서 감옥살이를 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이 됐으면 기소 검사에 대한 책임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 적절한 지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박 의원은 전반기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성폭력범 기소율과 재소자 성폭력 예방 교육 현황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검찰과 법무부의 성폭력법 적용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세월호 판결 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사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일반-특성화고 수업료 차별 시정 약속 받아 ‘문화가 있는 날’ 혜택, 지방 소외 현실 지적

#### 박혜자 새정치 의원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시일과 공연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장관은 물론 여야 의원들의 공

감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광주, 전남·북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지역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지원 격차가 최대 18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고, ‘문화도시 광주’, ‘예향 호남’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광주, 전·남북 모든 학교의 예술·체육교육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해 교육감들로부터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옛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었던 대관정터가 원형보존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전복원으로 결정된 사실과 군부대 내 문화제가 1000여건이나 방치됐다는 점 등을 밝혀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담보 대출**     보증서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키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